

민주당, 주택 공급 ‘속도전’… 비아파트·모듈러 총동원

주택시장 안정화TF 1차회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기간 단축
금융 지원·주거복지 등 폭넓게 다뤄
도시정비법 등 후속 입법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TF(태스크포스)가 12일 1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 인사말에서 “당장 내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융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금융 지원,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해 편해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에서 한 직무대행을 비롯해 한정에 정책위의장, 김한규·김영



한병도(왼쪽 아래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석원(오른쪽 아래 세번째)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북기왕·오기형·이해식·정태호·박상혁·김남근·김영환·박만규·인태준·이연희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했고, 정부에선 이석원 금융위원장, 이영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오랜 가치인 주거복지도 강화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내겠다.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경쟁으로는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

작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는 가로막고 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언행불일치인가”라며 “더욱이 작금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바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무능이다. 여당이었던 3년 동안은 주택 공급을 마뒀놓고, 야당이 돼선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에는 건건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 병목이 장기간 지속됐다”며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간공급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그리고 모듈러

방식을 도입해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된다”고 거듭 말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마련한 공급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아시겠지만, 9·7 대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법안이 8개월 넘도록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엔 무슨일이 있어도 해당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분양 시기’ 논란이 일어난 나눔형 공공주택 사전청약자에 대한 금리,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조건을 기존에 안내한대로 적용시켜달라고 위원 전원의 명의로 요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민주, ‘자질·정체성’ 놓고 후보간 정면충돌

전대 당대표 선거 마지막 토론회
김민석, 정청래 국정 운영 역량 검증
정청래, 金 과거 탈당 이력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마지막 방송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역량과 자질을 집중 검증했고, 정 후보는 김 후보의 2002년 대선 당시 탈당 이력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린 SBS 주관 당 대표 후보 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정 후보에게 국내 4대 대기업 회장들과 30분 이상 토론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는 확증편향 현상이 심하다. 김 후보가 당 대표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당 대표를 하게 되면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이야기를 많이 한다. 당 대표를 해본 적이 있으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기업 총수를 자주 만나서 좋

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자랑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경제 정책을 다뤄 본 적이 있는가. 기업 총수들과 대화할 정도로 경륜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고 안 해 본 것이 명확해서 물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불교계와 갈등을 일으켜 결국 지난 20대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에게 “그 당시 정 후보가 사과를 거부하고 탈당도 거부하고 문제 제기를 한 후보 측을 비난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는 “스님에게 물어보라. 정청래를 다들 좋아한다.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문화재 보호법으로 해결했다”며 “절에 가면 돈을 냈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를 돕

던 김민석 의원이 정몽준 국민승리21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을 탈당한 과거를 꺼내며 이에 대한 입장을 송영길 당 대표 후보에게 물었다.

송 후보는 “(김 후보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당시 저도 비판을 많이 했다.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았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다”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김 후보를 용서하고 받아줬다”고 김 후보를 옹호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독재적 방식이 불가피했다’, ‘박 대통령의 스마트한 덕분에 산업화를 해냈다’고 한 언급을 두고 ‘기가 막힌 이야기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핵심 코어층의 마음이 식은 것 아니냐’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여성 안전 공백”

토론회 열고 대책 마련 나서
“경찰 수사 오류 시정 위해 필요”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여성 안전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하는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역(對興)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그대로 드러난다”며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수사하지 못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경찰 수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럼에도) 국민 다수와 대부분의 전문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검

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이미 알았는지, 역사에 죄인으로 남는 게 두려웠는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다”며 “국민주권 정부라더니 국민 무시 정부, 국민 포기 정부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7월 31일 민주당이 국민의 우려와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법안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장치를 앗아버리는데 도장을 찍어줬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그(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의한 부작용)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단 없애고 보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범죄 수사 역량 약화로 인한 범죄 증가”라고 주장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안보실, 北 미사일 발사에 “도발 중단 촉구”

여야 한목소리 규탄

국가안보실이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1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긴급 회의를 열고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북한을 규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안보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원

산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후 엿새 만에, 올해 들어 11번째다. 오는 17일 시작되는 UFS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군사 태세 점검과 한미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을 두고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 등으로 반발해 왔다.

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도발 행위”라며 “즉각 군사 도발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 야외 기동훈련(FTX) 축소에 대해 “훈련이 위축되고 연합방위태세가 흔들린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촉구했다.

/서예진 기자 syj@